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8.

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1. 제안 이유

-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전문성·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고,
-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증·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,
- 단위 학교에 행정권한이양을 확대하고,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잡종재산 대부업무를 제1관서에 위임하고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심의회 위원을 9인 및 7인으로 함. (안 제5조)
- 나.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증·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- 다. 잡종재산의 대부업무를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,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, 제25조)

- 라.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 비율 한도를 70%에서 50%~30%로 함. (안 제34조)
- 마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토지의 지하·지상 공간 사용료 및 분수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함. (안 제31조, 제45조, 제63조)
- 바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. (안 제41조)
- 사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등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함. (안 제2조, 제30조, 제40조)

3. 기타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련법령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라. 합의사항 : 시설과와 공유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협의
- 마. 부패영향 평가 : 이상없음
- 바. 입법예고 :
- 입법예고기간 : 2007. 8.28. ~ 9.17.
 - 입법예고결과 :
 - 의견내용 :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위원 2명 추가 구성
 - 반영여부 : 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전문성·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의견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함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제33조"를 "제30조"로 하고, 같은 조제3호 중 "제36조"를 "제34조"로 한다.

제4조제1호 가목 중 "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"를 "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7인"을 "9인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제2호 중 "시설과장이 된다."를 "시설과장 및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"로 하며, 같은 조제1항제3호 중 "세입·재산관리담당"을 "세입·재산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항제1호 중 "5인"을 "7인"으로 하며, 같은 조제4항제2호 중 "재무과장"을 "행정과장"으로, "관리과장"을 "총무과장"으로, "시설과장이 된다."를 "시설과장 및 교육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"로 하고, 같은조 제4항제3호 중 "세입·재산관리담당"을 "세입·재산담당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"토지"를 "토지의 취득·처분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"대장가액"을 "영 제7조 제1항 제1호의 예정가격"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철거,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·폐지 및 처분
5.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신축 및 증·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의 취득

제25조 중 "행정·보존재산의 사용료"를 "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"로 한다.

제30조제2항제5호 중 "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」"을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제5항제2호 중 "「농어촌 정비법」 제2조제4호"를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"로 하며, 같은 조제5항제3호 중 "「문화예술진흥법」"을 "「문화예술진흥법」"으로, "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"을 "문화예술,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"로 하며, 같은 조제5항제4호 중 "「사회복지 사업법」"을 "「사회복지사업법」"으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제13조제7항"을 "제13조제8항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"를 "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"로 하여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
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

제40조제1항제2호 중 "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"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제3호 중 "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」"을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"으로 한다.

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조제4호 중 "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"을 "다만, 단독주택의 경우 200㎡를 한도로 한다."로, "분할매각할 수 있다."를 "분할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 시 잔여지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45조를 삭제한다.

제63조제1항 중 "1,000만원"을 "3,0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제1호 중 "200만원"을 "6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제1항제2호 중 "10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 1. 본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교육자치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. 2. (생 략) 3. 지역교육청 : 교육자치법 제36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----- ----- 제30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제34조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위임사무)①(생 략) 1. (생 략) 가. 당해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 2·3. (생 략)	제4조(위임사무)①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-----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 2·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①(생 략) 1.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한다. 2.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지원과장이 되며,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, 평생교육체육과 장, 총무과장, 행정지원과장, 시설과장이 된다. 3.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지원과 세입·재산관리담당 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 ②·③(생 략) ④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공유재산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으로 구성한다.	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)①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9인 ----- 2. ----- ----- ----- ----- 시설과장 및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 3. ----- ----- 세입·재산담당 ----- ----- ②·③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7인 -----

현행	개정안
<p>2.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재무과장</u>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, <u>관리과장</u>, <u>시설과장</u>이 된다.</p> <p>3.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재무과 <u>세입·재산관리담당</u>이 되고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<u>토지</u></p> <p>3. <u>대장가액</u>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·처분 및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(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25조(행정·보존재산의 준용 등) 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<u>행정·보존재산의 사용료는</u>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다.</p> <p>제30조(대부료의 요율) 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2. -----</p> <p><u>행정과장</u> -----</p> <p><u>총무과장</u>, <u>시설과장</u> 및 <u>교육장이</u>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</p> <p>3. -----</p> <p><u>세입·재산담당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토지의 취득·처분</u></p> <p>3. <u>영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정가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철거,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·폐지 및 처분</p> <p>5.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신축 및 증·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의 취득</p> <p>제25조(행정·보존재산의 준용 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0조(대부료의 요율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5. 주거용 건물(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.)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연 1,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. 다만, 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(생략)</p> <p>⑤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폐교일 이전 5년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</p> <p>3. 「문화예술 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</p> <p>4.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</p>	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·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 ----- ----- -----</p> <p>3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----- ----- 문화예술,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----- ----- -----</p> <p>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1조(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</p> <p>제34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(이하 이 조에서 "대부료 등"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(또는 광역시장)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</p>	<p><삭제></p> <p>제34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-----제13조제8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</p> <p>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</p> <p>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,000제곱미터 또는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<u>분할매각할 수 있다.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분할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시 잔여지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.</u></p>
<p>5. (생략)</p> <p><u>제45조(분수립의 설정)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「산림법」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63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u></p> <p>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<u>1,000만원</u>을 초과할 수 없다</p> <p>1.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u>2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2.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u>1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<u>제63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u></p> <p>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3,000만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u>600만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u>300만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(참고) 법령

◆ 법령 일부 발췌(조례안 순)

▣ 조례안 제2조 관련 (인용 규정 및 인용법명 변경에 따른 개정)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전부개정 2006.12.20 법률 제8069호]

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제30조 (보조기관)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(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·도는 2인)을 두되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.

②부교육감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, 그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.

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·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4조 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"지역교육청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조례안 제5조 관련 (행정직제 변경에 따른 개정)

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

[개정 2007.03.01 규칙 제453호]

[개정 2007.06.28 규칙 제467호]

제4장 지역교육청

제23조 (관리국) ① 관리국에 총무과·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.

■ 조례안 제6조 관련 (시행령의 예정가격 정의 규정 인용하여 개정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6.12.30 대통령령 제19816호]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■ 조례안 제30조 및 제40조 관련 (인용 규정 및 인용법명 변경에 따른 개정)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일부개정 2005.12.23 법률 7738호] **법명변경**

농어촌정비법

[일부개정 2005.5.31 법률 7550호] **법명변경**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농어촌정비사업(이하 "정비사업"이라 한다)"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·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,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.

6. "농업생산기반시설"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, 양수장(양수장), 관정(관정: 우물) 등 지하수 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(취입보), 용수로, 배수로, 웅덩이(유지), 도로, 방조제, 둑(제방)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.

문화예술진흥법

[전부개정 2007.4.11 법률 제8345호] **법명변경**

제2조 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연예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어문) 및 출판물을 말한다.

2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업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"문화시설"이란 공연, 전시, 문화 보급,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.

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사회복지사업법

[일부개정 2005.7.13 법률 7587호] **법명변경**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[일부개정 2005.3.18 법률 7392호] **법명변경**

■ 조례안 제31조 관련 (삭제)

- (시행령 조문의 신설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 삭제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6.12.30 대통령령 제19816호]

제31조 (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

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율(이하 이 항에서 "입체이용저해율"이라 한다)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,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. <신설 2006.12.30>

■ 조례안 제34조 관련 (조례로 위임된 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정)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7.7.2 대통령령 제20144호]

제3조의2 (대부료의 감액 등)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7.7.2>

1.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**1천분의 500**
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**1천분의 300**

■ 조례안 제41조 관련

건축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7.9.10 대통령령 제20254호]

제80조 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) 법 제4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.

1. 주거지역 : 60제곱미터
2. 상업지역 : 150제곱미터
3. 공업지역 : 150제곱미터
4. 녹지지역 : 200제곱미터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: 60제곱미터

■ 조례안 제45조 관련

- (시행령 조문의 삭제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 삭제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6.12.30 대통령령 제19816호]

제47조 삭제 <2006.12.30>

삭제된 시행령

제47조 (분수림의 설정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(분수림)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◎ 참고사항

- 분수림이란?

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분수(分收)를 목적으로 산림소유자(국가 또는 개인)와 시업자(施業者)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을 실시한 국유림 또는 민유림.

■ 조례안 제63조 관련

- (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 개정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6.12.30 대통령령 제19816호]

제84조 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보상금은 **3천만원**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6.12.30>

③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